

국힘, 노동개혁 입법 드라이브... “노조 회계 투명성 정비”

“1700억 조합비 깎깎이 회계”

민주노총 옥죄기 속도전

운송시장 개혁 방안 마련도 추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서고,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정부 방침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수천억 원씩 노조원들로부터 걷은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노조 회계 투명 관리 사례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경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이 알 수 없는 ‘깎깎이 회계’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지 묻자 “하대경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돌리고 있다”며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지만 사실 노조가 먼저 투명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들고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깎깎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당정은 오후에 이와 관련한 협의회를 연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회의원은 진짜 제도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복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 지임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 회사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단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블로소독의 착취 운송구조를 정상의 운임구조로 개혁하겠다”며 “운행기록장치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사고 근절 방안 등 도로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8-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화 광양시장, 조수진 국회의원, 이상민 장관, 강종만 영광군수, 박홍물 목포시장,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호남 소외 없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

호남 무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 조수진·주기환 등 회동 성사 노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호남의 미래를 위해 더는 호남이 소외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호남 일부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로사 항을 들은 뒤, “행안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상민 장관과 호남 기초단체장들과의 밀접한 협의 체계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주기환 전 비대위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 광역상수도망 설치, 전남 의과대학 유학 및 거점도시 신속 응급의료체

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무소속 지자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이 무소속 단체장을 선출해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행정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안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라면서 “어렵거나 애색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행안부를 활용해달라”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 4월 순천에서 개막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월 목포에서 치러지는 전국체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를 제안한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순천 국가 정원은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제1호 국가 정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개막식을 겸해 전남의 순천·여수·광양과 경남의 하동·사천을 둘러보고 현안을 정취한다 면, 국민통합 지역화합 차원의 ‘화계장터 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간담회에는 무소속인 정인화 광양시장, 박홍물 목포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참석했다.

업무일정상 이날 오찬에 불참한 노관규 순천시장 등 호남지역 다른 무소속 단체장 등은 별도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무소속 단체장만을 초청한 간담회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文정부 통계 왜곡은 중대범죄·국기문란”

철저한 수사·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은 20일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국기 문란, 중대 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은 국가통계마저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낸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앞뒤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통계 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민주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잡맞된 통계 조작, 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국가를 허무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대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후진 독재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국민들 속이고 외국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탄생할 때부터 조작으로 탄생을 했고 정부 유지하면서도 계속 조작을 일삼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의견도 나왔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진복 정무수석 사면 유력 MB 만나 생일 축하

대통령실 “전 대통령 축하 관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생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

의 관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임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만큼 ‘생일 축하’ 관례를 내세워 사면 논의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목포시 공고 제2022-2083호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시민공청회 개최 공고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전문가 등을 패널로 모시고 소각방식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민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 사업규모** 220톤/일

2. 시민공청회 개요

- 개최일시** 2022년 12월 28일(수) 14:00
- 장 소**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 참 여 자** 관심있는 모든 시민

공청회내용

- 소각처리 방식(스토커, 열분해, 유동상) 운영 및 효율성
-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 사업 추진방식(민간투자, 재정),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

*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89)로 연락바랍니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